장휘국(앞 줄 가운데) 광주시교육감 후보가 2일 밤 당선이 확정되자 지지자들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장만채(앞줄 가운데) 전남도육감 후보가 2일 밤 당선 확정 소식을 듣고 지지자들과 만세를 부르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MB교육’ 염증 ‘변화욕구’ 컸다

무상급식·무상교육·전교조 … 정부 정책과 상충·재원확보 문제

■광주·전남 교육감 선거 진보 석권 의미

6·2지방선거 광주·전남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성향의 장휘국 후보와 장만채 후보가 교육감으로 당선되면서 지역 교육계도 대변혁의 기류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공통점은 50대 나이의 젊은 교육감인데다 MB정부의 교육 정책을 반대하는 진보 성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이들이 ‘MB교육 척결’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현 정부의 경쟁·수월성 교육정책과 상당 부분 마찰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무상급식과 무상의무교육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각종 공약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진보성향 교육감의 당선 원인과 의미·전망·과제 등을 분석해 봤다.

◇ 진보교육감 석권 원인=현 정부가 내세운 ▲영어몰입교육 ▲일제고사 실시 ▲성적 공개 ▲우열반 편성 ▲국제중·자율형 공·사립고 신설 등 경쟁과 수월성 교육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염증이 진보 교육감의 탄생에 큰 힘을 보탰다는 분석이다.

새해벽두에 터진 서울발 교육비리도 교육계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식을 확산시켰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비리 척결이 화두로 등장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법을 무시한 전교조 명단 공개·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중징계·민노당 가입 혐의 현직 공립교사 파면·해임 등 현 정부의 전교조 탄압 정책도 진보세력의 결집을 이끌어내는 원인이 됐다.

특히 전남에선 3선 교육감에 대한 거부감과 낙후된 전남교육의 개혁을 위해서는 참신하고 젊은 인재가 교육감이 돼야 한다는 분위가 조성된 것도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됐다.

광주에선 현 광주시교육감인 안순일 후보의 초등출신 경력이 교육계의 여론 단일화를 이루는 데 실패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교사는 “‘전교조 바람’이 거셌던 것도 사실이지만, 교육은 중등 출신 교육감이 맡아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다”면서 “안 후보가 교육감으로서 훌륭한 분이긴 하지만, 변화를 희망하는 교원의 열망이 더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진보 후보들에게 참패한 전·현직 교육감측은 패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듯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안순일 후보측의 충격은 더욱 컸다. 수능 5년연속 전국 1위 등 재임기간동안 이룩한 업적이 전국 최고였기 때문이다. 안 교육감측은 “선거는 조직력 싸움이라는 말이 있던데, 전교조의 결집력에 진 듯하다”며 말을 아꼈다.

◇ 새 인물 교체 의미=광주·전남 시·도 교육감 당선자가 공동으로 내세운 학부모와 학생·교원 모두가 행복한 교육정책 실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교육현장의 의견과 학부모·학생·시민 사회단체·전교조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한 소통의 교육 행정을 펼치겠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 교육 정책에도 지역민의 여론이 상당부분 반영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전남 교육정책의 연계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선거운동 기간동안 ‘혁신교육 벨트 공동선언’을 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교육계 비리 청산 ▲광주·전남 학생·교사 교류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만채 도 교육감 당선자는 “한 뿌리인 광주·전남이 교육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교류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별도의 정책 기구를 만들어 광주·전남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보이지 않는 벽을 교육계부터 무너뜨리겠다”고 말했다.

◇ 정부 정책과 충돌 예고=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힌 만큼 현 정부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장휘국 시 교육감 당선자는 “현 정부와 맞서고 있는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에게서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을 봤다”고 공개적으로 밝힐 정도다.

당장 마찰이 우려되는 대목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민노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립학교 교사 134명(광주 3, 전남 2)에 대해 파면·해임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부분이다.

징계권은 교육감에게 있는 만큼 진보성향의 양 당선자가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지도 관심사다. 다만 광주는 안순일 교육감의 임기가 오는 10월까지 보장돼 있어 교과부의 방침을 수용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여기에 양 교육감 당선자가 일제고사 반대 방침을 밝힘에 따라 정부 주관의 각종 학력고사 시행시에도 마찰이 예고된다. 일부에서는 광주·전남 학생들만 일제고사를 거부할 경우 그 파장이 심각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 진보 교육감의 과제=장휘국·장만채 당선자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무상급식 전면 실시와 체험학습·수학여행경비지원 등 무상교육 실현이다. 하지만 한정된 교육재원이 걸림돌이다. 광주·전남 전체 초·중·고교에서 무상급식만 실시돼도 매년 광주 970억원, 전남 1050억원 등 202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의 연간 교육 예산은 4조원에 육박하지만, 교원 임금 등을 제외하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각 3000억원 안팎에 불과하다.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경우 정부지원 예산 축소 등까지 감안해야 하는 만큼 재원 확보 방안은 해결해야할 과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96세 할머니 “100살때 또 투표 할 것”

■투·개표 이모저모

○…6·2지방선거 개표소가 마련된 광주 서구 화정동 빛고을 체육관에서 투표지 분류기에 용지가 걸리면서 개표작업이 한때 중단됐다. 이날 오후 7시30분께 서구청장 선거 개표작업에 나선 참관인·사무원 등 20명은 농성 1동 제2투표구에 대한 개표작업을 하던 중 투표지 분류기에 투표지가 걸리는 바람에 개표작업을 10여 분 동안 진행하지 못했다.

개표작업 관계자들은 투표지 분류기에 걸린 투표용지를 빼낸 뒤 해당 투표구에 대한 개표작업을 다시 재개했다.

선관위 제공 버스로 투표

○…교통사정이 여의치 않은 전남 산간·도서 지역 유권자가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버스로 불편을 덜었다. 전남도 선관위는 2일 교통이 불편한 전남 지역 149개 읍·면·동에 45인승 이상 버스 40대, 45인승 미만 46대, 15인승 이하 82대, 선박 34척을 지원했다.

선관위는 295개 읍·면·동 가운데 투표소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대중 교통편이 운행되지 않거나 운행횟수가 4회 이내인 지역을 선정해 교통편을 제공했다. 전남도 선관위에서 유권자에게 버스를 제공한 것은 2008년 4·9 총선 이후 두 번째다. 2008년 2월 개정된 선거법은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정당, 후보자와 협의해 교통 불편 지역에 사는 선거인, 노약자, 장애인 등에게 교통편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오는 9월 100번째 생일을 맞는 기길수 할아버지가 2일 오전 11시 30분께 광주 북구 건국동 9투표소인 향토공예학교에서 투표를 마쳤다.

기 할아버지보다 1년 뒤인 1911년 7월에 태어난 하 암 할머니도 이날 오전 9시께 북구 임동에서 아들이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투표소에 도착해 한 표를 던졌다.

나주에서는 96세의 오북실 할머니가 75살이나 된 딸의 부축을 받아 산포초등학교에서 투표를 했다. 오 할머니는 “꼭 투표하고 싶어 딸과 함께 투표소에 왔다”며 “100살이 되는 다음 지방선거에도 꼭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 최고령 유권자로 매번 선거에서 관심을 끌었던 광주 북구 용두동 최양단(1897년 8월 출생) 할머니는 건강상의 문제로 투표하지 못해 아쉬움을 줬다.

지지후보 적어 오기도

○…유권자 1명이 8명을 투표한 이번 선거에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을 헷갈리지 않기 위해 메모지를 동원한 유권자들의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2일 오전 11시30분께 광주시 건국동 제1투표소를 아들·며느리와 함께 찾은 박장길(69·광주시 북구 본촌동)씨는 “후보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 평소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을 메모지에 적어왔다”면서 “투표 용지를 받아 든 순간 글씨의 크기도 작고, 후보자의 숫자도 많아 당황했는 데, 메모지 덕분에 평소에 지지해온 후보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씨의 며느리 안주희(31)씨도 “지지 후보의 이름을 적은 메모지를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 했다”며 활짝 웃었다.

‘투표 확인증’ 과제물로

○…대학생 등 젊은 층 투표 독려를 위해 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투표를 한 뒤 확인증을 발급받아오도록 한 과제를 제출해 눈길을 끌었다.

2일 오전 9시40분께 광주시 동구 계림1동사무소 투표소에서 이숙현(22·광주여대 초등특수교육과 3년)씨는 투표를 한 뒤 선거관리원에게 투표확인증을 요구했다.

언어장애아교육 과목을 수강하는 이씨는 “수업시간에 담당교수가 ‘요즘 대학생들은 투표를 하지 않아 문제’라며 투표확인증을 끊어올 것을 과제로 내줬다”고 말했다.

/최권일·박진표·이종행·양수현·김호기자 cki@kwangju.co.kr